

“한옥마을 축제 콘텐츠 개발해야”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 5분발언 통해 촉구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이 한옥마을 축제 콘텐츠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순정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사진)은 22일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한국으로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를 관광도시로 이끈 한옥마을이 떠나는 중심의 상업화 문제와 정체성 논란과 더불어 대표 콘텐츠 부족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북 관광의 중심에 자리잡은 한옥마을을 대표 콘텐츠로 한옥마을만의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옥마을 축제가 외부로 분산되면서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전주대사습놀이와 한옥마을 이간 상설공연, 태조어진 본

한옥마을 축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객의 외연 확대에만 집중해 정작 한옥마을 관광 콘텐츠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내 대규모 축제와 행사를 제한 ‘전주비법법’ 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남부시장, 동문거리 등으로 외연을 확장해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주세계소리축제’ 도 한옥마을 공연을 한국소리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는 등 한옥마을 축제는 축소해왔다.



한편 김 의원은 “한옥마을 관광객의 분산을 통한 전주관광의 외연 확장에는 공감하지만, 기획이나 빈약한 한옥마을 문화 콘텐츠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며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주 한옥마을이 가진 강점을 살린 축제 콘텐츠를 개발, 정체된 한옥마을 관광 콘텐츠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민의 강점을 살린 전통 식문화 축제와 같은 민관이 함께 주관하는 차별화된 음식문화축제를 개발하면 한옥마을 대표 축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옥마을 관광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문화 콘텐츠로 지난해 전동시장에서 시작해 올해 풍남문으로 자리옮긴 미디어파사드 프로그램, 남부시장 야시장과 청년몰 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한옥마을 관광 콘텐츠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며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주 한옥마을이 가진 강점을 살린 축제 콘텐츠를 개발, 정체된 한옥마을 관광 콘텐츠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딱걸렸네

최근 군산경찰서 임대환경위가 무허가로 젓갈 등을 생산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전주시의회,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안 가결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이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창업지원과 경영안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주 시내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시책 발굴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전주시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근거 등을 딱았다.

조례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지구로운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상 지원사업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업종연합 또는 페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형유통업체 진출로 지역 상권이 붕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기반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주시와 협의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인

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형유통업체 진출로 지역 상권이 붕괴되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

상공인의 창업기반과 경영안정 지원

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주시와 협의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

했다.

/인진수기자

스피치·웅변·면접·리더쉽·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겸임교수
- 한국융언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경력 40년 장사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새운말, 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BC현장다시보기등 방송출연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약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원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

전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2019년까지 397억원 투입

중앙처리구역 공사 진행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현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전주의 땅 속 지도를 바꿔나가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오는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97억원(국비 199억원, 지방비 198억원)을 투입해 금암동·진북동·노송동 주변 일원의 하수관로 55.3km를 정비하는 중앙처리구역(3·1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빗물과 생활하

수가 동일관으로 배출되는 합류식 하수처리방식에서 빗물과 생활하수가 분리 배출되는 분류식 하수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3분구인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총길이 4.9km)과 10분구인 진북동 우체국 주변지역(총길이=3.9km) 등 모두 2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 덕진·중앙(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중앙처리(8·9·10분구) 한옥마을 및 공구거리, 팔복(1·2분구) 팔복동 금학천 일원 지역의 경우에도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08억원을 투입해 61.1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완산소방서, 주택화재 대응 기동 서비스반 운영

완산소방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대응 기동 서비스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동 서비스반은 소방서 예방안전 2개 팀으로 운영, 지역주민이 신청할 경우 접수 후 3일 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건수 5183건 중 28%(1433건(28%))가 주택화재로, 전체 인명피해 224명 중 53%(119명)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화재로부터 소중한 인命을 지키기 위한 안전점검은 오는 2017년까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유무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제태환 서장은 “도민 스스로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진수기자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 면직 전북교육청 유보 결정 갈등 우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이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전북교육청이 ‘유보’ 결정을 내려 또다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A(34)씨의 승용차 운전석 앞문부터 뒤쪽 훈다까지 나사못으로 굽어 훠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이 날까지 군산시 수송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 24대를 나사못으로 굽어 훠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를 검거한 김강우 경위는 “피해 금액은 차량 수리가 모두 끝나야 알 수 있다”며 “피의자가 범행동기를 말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이 전원 복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나머지 13개 시도교육청은 미복귀 전교

조 교사를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에서 4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교조 교사를 직권면직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법적 검토를 통한 신중모드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직권 면직은 당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법률 검토 결과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직권면직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에 허여 징계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기준 단협 무효화’,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배제’ 등 4가지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고민형기자

